

주간 통일정세

2014-50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북한 "통진당 해산 주범은 박근혜"...반정부 투쟁 선동(12/22, 조선중앙방송)
 -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22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한 것을 거론하고 "이번 사태의 막후 주범이 바로 다름아닌 박근혜이며 그가 남조선에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놓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음을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함.
 - 담화는 남한의 현 시국을 '유신독재 부활'로 표현하며 "행정이니 입법이니 사법이니 하는 것들도 다 청와대의 정치시녀, 꼭두각시일뿐이라는 것을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남조선 인민들은 유신독재를 되살리는 괴뢰보수패당의 파쇼적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일떠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함.

- 북한 "남한, 유엔 인권모략 적극 가담...대가 치를 것"(12/25,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대변인 담화에서 "극악한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으로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 나선 괴뢰패당은 그 죄악으로 얼마나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담화는 유엔총회 본회의가 지난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2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을 거론하고 이는 "사실상 우리를 반대하는 선전포고"라며 남한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돌격대"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음을 방송은 전함.
 - 이어 "추악한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들이 우리에게 무모한 인권전쟁을 선포해온 이상 우리는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며 "우리의 무자비한 정의의 징벌은 미국의 앞잡이, 동족 대결에 미칠대로 미친 괴뢰역적패당에게 선참으로(가장 먼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을 방송은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통진당 해산 빌미 대남 인권공세 '포화'(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인권 공세의 종착점은 도발자들의 파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에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은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서나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등을 거론, 남측에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사회주의를 넘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라고 비난함.
 - 또한, 신문은 이날 통진당 해산 판결 이후 남측에서 벌어지는 시민사회의 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통진당 해산을 합법적인 정당에 '친북'의 감투를 씌운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함.
- 북한 "남한, 올해 남북관계 파괴" 거듭 비난(12/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올해 남북관계를 총평한 '끊임없이 이어진 북침 불안장난 소동'이라는 글에서 "올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해 북침을 가상한 군사적 도발에 날뻐으로써 북남관계 개선 기회를 파괴했다"고 주장함.
 - 특히 신문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해 올해 처음 적용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극히 위험한 핵전쟁 각본'이라고 평가하며 "임의의 시각에 북침 핵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다른 글에서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를 "괴뢰 호전광들이 미국과 북침을 노린 모의를 벌이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렸다"고 헐뜯음.
- 북한 "원전 해킹 북한 소행설은 터무니 없는 날조"(12/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모략꾼들을 징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패당은 최근에 발생한 저들의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한 해킹 사건도 무작정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다"며 이는 "터무니 없는 날조설"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버 공격까지 반공화국 모략에 악용하며 도발을 걸어오고 있다"며 "역적패당의 히스테리적인 망동은 북남관계가 왜 지금과 같은 파국에 처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고 지적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정부, 박지원 방북 불허…현정은 방북은 승인(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북한의 요청으로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을 불허했으며, 함께 방북을 신청했던 나머지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은 모두 승인됐다고 전함.
 - 이에 따라 김대중평화센터측에서는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등 7명이, 현대아산에 서는 현정은 회장 등 7명이 24일 각각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금번 방북의 취지 및 지난 16일 박 의원이 방북한 만큼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방북은 적절치 않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음을 뉴스는 전함.
- 김정은, 이희호 여사에 친서 "민족통일 위해 노력할 것"(1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우리는 선대수뇌분들의 통일 의지와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민족 통일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다음해(내년에) 좋은 계절에 녀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추운 겨울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유의)하시기를 바란다"며 친서를 맺었다고 뉴스는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보낸 별도의 친서에서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조의를 표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현정은 회장 선생의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음을 뉴스는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軍 "북한군, 지상군 병력 축소…공군 1만명 늘려"(1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북한 및 주변국 군사력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북한군 전체 병력은 119만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육군은 102만에서 101만명으로 1만명 줄었고 대신 공군 병력은

- 11만명에서 1만명 늘어났다고 보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군의 총병력 규모는 지난 2012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나타난 병력 규모에 비해 변동이 없었지만 일부 부대의 소속 변동으로 육군과 공군의 병력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음을 뉴스는 전함.
 - 이밖에 합참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1천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전역에 작전 배치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고정화된 방공무기를 보완하려고 사거리 100km 안팎의 기동화된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보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독도 근해 표류 北어선 구조...내일 송환(12/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보도를 통해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이 지난 19일 우리측에 구조돼 23일 북측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고 전함.
 - 지난 19일 오후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72t급 저인망 북한 어선이 우리 해양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으며, 이 배는 함경남도 단천항에서 정박 중에 닻줄이 절단돼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10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상에서 북한 주민과 선박을 인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 통지문을 23일 관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발송했다고 뉴스는 전함.
- 김희중 대주교 내년 방북 추진 알려져(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김희중 대주교가 23일 광주대교구청에서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민관과 종교인의 대북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현재 종교인들과 그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김 대주교는 "지정학적 배경 때문에 남북관계는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목소리를 많이 내야 우리 정부에도 힘이 된다고 본다"며 "경제적으로도 북한과의 교류를 늘려야 상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을 뉴스는 전함.
- 작년 방북자 7만6천여명…2008년의 40% 수준(1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통계청의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기준으로 방북자 수는 7만6천503명(연인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보도함.
 - 이는 MB정부 5년간 방북자가 가장 많았던 1년차 때인 2008년에 18만6천443명이 방북한 것에 비하면 41%에 불과한 수치라고 뉴스는 전함.
 - 뉴스는 2013년 방북자 중 개성공단 관련 방북자는 7만5천990명으로 전체 방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함.
- 남한 주민 1명 불법입북…남북 26일 송환 합의(12/2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우리 국민 마모(52) 씨가 지난달 말 불법 입북했다면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를 설득해 부모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마 씨가 불법 입북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남쪽에서 자기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며 자유를 구속하므로 공화국에서 살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그의 구체적인 입북 경위는 언급하지 않음.
 - 연합뉴스는 24일 통일부가 북한 매체의 보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지문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부는 북측이 제의한 대로 오는 2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24일 오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北 인권' 문제 의제 상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괴뢰패당이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우리(北) 사회주의를 넘보는 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라고 비난(12.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가 '美 CIA 고문'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南 괴뢰들은 친미주구, 식민지 노복'이라며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에 바른말 한마디 못하는 쓸개 빠진 주구들은 우리(北)의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비난(12.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중앙총대변인 담화(12.23), 南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정치테러행위, 진보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교살만행, 동족에 대한 정치적도발"이라며 '反보수패당 투쟁' 선동(12.23, 중앙방송·중앙통신)
- "현 괴뢰집권 세력의 동족대결 정책과 파쇼독재체제 구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음모의 산물"이라고도 비난 공세(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참여(11.18, 유엔총회 제3위원회, 北 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 "주제넘은 망동, 남조선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독재사회, 인권불모지"라고 최근 '통진당' 해산 결정 등 거론하며 비난(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對北 발언(도발시 응징능력과 의지 과시,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 것 등) 관련 '괴뢰군의 사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전방에까지 나가 객기를 부렸다'며 '美 상전도 우리(北)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막아줄 수 없다'고 위협(12.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매국이 애국을 칼질하는 전대미문의 파쇼폭거'라며 '박OO 패당은 역대 통치배들을 훨씬 능가하는 희세의 파쇼악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내 놓았다'고 비난(12.25, 중앙방송·민주조선)
-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 등 해킹사건 관련 '통치위기(정윤희 국정개입·통진당 해산 등)를 동족대결책 동강화로 수습해 보려는 것'이라며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을 공화국과 연결시켜보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은 천안호침몰사건과 꼭같은 모략소동'이라고 비난(12.27,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인터뷰' 상영 비난... "미국이 인터넷 기동 핵방"(12/27, 연합뉴스)
 -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7일 대변인 담화에서 소니에 대한 해킹 공격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보수세력들이 성탄절에 영화 상영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담화는 영화 '인터뷰'는 국가수반의 명예를 침해할 금지한 국제법에 배치되는 '불순반동 영화'라며 "반테러를 주장하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난했으며, "우리의 (공격) 대상은 한갓 개별적 회사들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날강도 무리들"이라며 소니 해킹설을 거듭 부인하고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한 증거 공개, 비공개 공동조사 등을 요구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우리의 변하지 않은 주적은 미국"(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우리의 변하지 않은 주적은 미국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올해 조(북)미관계 1년사의 총화는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의 변하지 않은 주적 중의 주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올해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으며 대결을 노골적으로 선동했다"며 지난 2월의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과 '키 리졸브 연습'을 대표적 사례로 꼽음.
 - 신문은 또 "정치군사적 압박으로는 우리의 '선핵포기'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면서 "인권 공세는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주장함.
- 북한, 남한·미국·일본 "인권 논할 자격 없다"(12/23,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23일 '민주의 교살자,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는 제목 아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남한의 인권을 문제 삼은 다수의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특히 안보리의 정식 안건 채택에 대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해 모략의 판을 더 크게 벌이려는 것"이라고 헐뜯었다.
 - 민주조선도 23일 논평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살펴보는 인간 세계의 보편적 윤리부터 배우는 것이 정신 분열증에 시달리는 미국을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비판함.

- 조선신보 '소니해킹설' 부인... "북미 사이버전은 허구(12/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오바마가 연출한 조미 사이버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북한의 인터넷 불통 사태 이후 '북미 사이버전'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황당무계한 허구"라고 일축함.
 - 특히 "(북한 인터넷 불통 원인이) 통신망의 점검 등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이 귀에 박힌 사람들은 모든 사태를 조미(북미) 대결의 줄거리에 맞춰보게 된다"며 북한을 '소니 해킹' 배후로 지목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외교관 "영화 '인터뷰' 배포에 물리적 대응 없을 것"(12/24, AP통신)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이 영화는 "우리의 주권과 최고지도자의 존엄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조롱"이라며 북한은 24일 시작된 '인터뷰'의 온라인 배포와 성탄절부터 이어질 극장 상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보도함.
 - 그러나 김 참사관은 영화의 배포·상영과 관련해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참사관은 또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해킹된 것과 북한은 연관이 없고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공동조사를 거부한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푸틴, 오바마·김정은에 동시 방러 초청(12/22, 타스통신)
 - 타스통신은 22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기념 70주년 행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함께 초청했다고 보도함.
 -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은 22일(현지시간) "2차대전 당시 반(反)히틀러 연합에 속했던 국가들의 정상들이 초청됐다"며 "지난 (60주년) 승전기념 행사에 초청됐던 국가들이 주로 포함됐다"고 통신을 보도함.
 - 우샤코프는 또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도 초청장을 보낸 사실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보인 초기 반응은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승전기념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통신을 통해 밝힘.
- "러시아, 북한에 러시아어 교재 1천400권 기증"(12/25, 자유아시아방송(RFA); 러시아의소리)
 - 자유아시아방송은 25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웹사이트를 인용해 연해주 정부가 문학, 역사, 언어 등 여러 분야의 러시아어 교재 1천365 권을 북한에 기증했다며 기증식이 24일 주 정부 청사에서 열렸다고 전함.
 - 림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기증식에서 북한이 오랜 기간 러시아어 교육에 관심을 쏟아왔다고 사의를 표시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북러 양측이 북한 사회에서 러시아어를 대중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보도함.

아. 국제기구

- 뉴욕 맨해튼에 '북한 인권결의안 환영' 포스터(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유엔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반(反) 인권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는 포스터가 2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나붙었다고 보도함.
 - 재미교포 한태격(66)씨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K)가 기획한 이번 포스터는 한글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환영합니다"라고 적었다고 뉴스는 전함.
 - 이번 포스터는 타임스스퀘어, 한인타운, 그랜드센트럴역 등 맨해튼내 중심가 3곳에 28일까지 게시된다고 뉴스는 전함.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으로 다룬다(12/23, 연합뉴스)
 -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고 연합뉴스는 23일 보도를 통해 전함.
 -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우리나라의 오준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에서 처음 논의됐다는 것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 인권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음을 뉴스는 전함.

자. 기타 국가

- 북한, 유럽 CIA 고문협력 비난...“인권유린 공범”(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날날이 드러난 인권유린공모자들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국 등 EU 21개 국가들이 CIA에 비밀감옥과 심문기지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의 인권유린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국제법을 심히 위반한 것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럽은 인권문제를 논할 기본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강조함.

- 北, '올해 北-美관계 1년사의 총화는 미국이야말로 우리(北)의 변하지 않은 주적중의 주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제와 반드시 총결산할 것이며 쌓인 원한을 풀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12.22,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가들의 발언(미국 세계지배구조 이미 힘을 상실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개탄의 목소리는 미국이 이제는 역사의 퇴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라며 '악마의 제국이 늙어가고 망해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12.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재러시아 동포 정일심, 12월 22일 평양 출발(12.22,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정계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對北 '전략적 인내정책' 비판(의회조사국 보고서 등)을 전하며 이는 "미국의 對北 정책에 총파산을 선고하고 우리(北)의 병진노선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음을 실증하는 일대 쾌거"라며 '對北정책 숙고'를 주장(12.23, 중앙통신)
- 美 당국자들의 '北 인권문제' 언급(12.10.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의 '세계 인권의 날, 탈북자 초청 대화' 등)을 "핵 소동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北)의 제도전복을 인권을 무기로 이루어 보려는 것"이라며 'CIA 고문만행 등 미국의 국내외 인권유린실태' 비난(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철호 에티오피아 주재 北 대사, 12월 23일 주재국 대통령(물라투 테쇼메)에게 신임장 전달(12.26, 중앙방송)
- 알제리 대통령(아비델 아지즈 부테플리카), 12월 23일 새해(2015년) 즈음 김정은에게 선물 전달(駐中 北 대사관) 보도(12.26,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장기근무 해외공직원 소환명령"(12/22, 산케이신문)
 - 산케이 신문은 22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해외 장기근무자에 대한 소환을 명령했다고 보도함.
 - '재외 공관 근무자와 공직원 중 직책을 불문하고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사람은 귀국시키라'는 김 제1위원장 특별지시가 11월 담당기관에 전달됐다고 신문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비밀자금을 취급하는 노동당 39호실의 러시아 지역 책임자가 지난 6월 이후 제3국에 망명을 타진한 일과 당 산하 기관의 중국 주재 당국자가 실종된 사건 등이 지시의 발단이 됐다고 신문은 소개함.

- 북한 김정은 잇단 '주민생활 챙기기'...메기공장 시찰(12/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보도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메기공장을 시찰했으며, 이번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으며 인민봉사총국의 최영남 총국장과 김광성 당 책임비서가 이들을 맞았다고 신문은 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물고기 양식은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일부 일꾼들이 아직도 이런저런 조건 타발만 하면서 양어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함.
 - 이어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공장 현대화를 위해 설계·시공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 김정은, 군 장성 이끌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을 맞아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라고 전했다지만 정확한 참배 시점은 밝히지 않음.
 - 이번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 군 고위간부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군대 채소온실 시찰...과학화 강조(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대에서 운영하는 채소온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온실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농사의 과학화·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협동해 선진영농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전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교육을 통해 선진 과학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며 우수한 경험과 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당 정책을 설명하는 월간 잡지를 새로 만들 것을 지시했으며,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수산 부문 공로자에 직접 표창 수여(12/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인민군대 수산 부문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꾼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1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밝힘.
 - 수여식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수산 부문이 올해 어획 목표 초과 달성으로 '물고기 대풍'을 이뤘다며 "수산 부문에서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 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됐다"고 강조함.
 - 그는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가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 책동을 더 악랄하게 벌이면서 우리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며 수산 부문에서 잡은 물고기를 "포탄 한 발, 총탄 한 발"에 비유함.
 -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한 해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전투적 과업을 받아안게 되는 것은 당 중앙이 수산 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 보여준다"며 당 창건 70주년인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독려했.
- 표창 수여식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정철 보위사령관이 참석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김정은에 충성 다짐(12/24,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4일 1면 사설 '선군혁명업적은 최후승리의 만년초석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는 선군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밝힘.
 - 신문은 또 2~3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을 즈음해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소식을 자세히 전함.
 - 한편 북한 매체들은 24일 김정숙의 97회 생일에도 초점을 맞춰 그의 지난 삶을 돌아보거나 추모하는 주민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보냈음.
- 북한, 군 후방일꾼대회 개최...김정은 서한 전달(1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꾼대회'가 개최됐다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서한을 대회에 전달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후방일꾼대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시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음.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후방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기간 인민군대의 후방일꾼들이 군인생활 개선을 위해 애를 많이 썼다"고 치하하고 후방일꾼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군수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병들"로 지켜세웠다고 소개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은 조모 '띄우기'...생모 고영희엔 '침묵'(12/23,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김정숙의 97회 생일을 하루 앞둔 23일 '수령결사옹위의 신념 굽이치는 오산덕'이라는 제목의 기행문을 신고 김정숙의 탄생 설화, 항일투쟁 활동, 김일성 주석과의 혁명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함.
 - 함경북도 회령군에 있는 생가 방문기인 이 글은 김정숙을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쳐오신 백두산 여장군"이자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태양복,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게 하여주신 어머니"이라고 부각함.
 - 우리민족끼리도 23일 '태양의 해발로 영생하시는 백두산 녀장군', '백두광명성을 받들어 올리신 혁명의 어머니' 등의 글에서 "항일대전의 격전장에서 자제분을 키우며 민족만대의 중흥을 담보하여 놓으신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 절세의 백두산 여장군은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도 없다"고 주장함.
- 북한, 헌법질 맞아 체제 우월성 강조하며 준법 촉구(1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인민의 낙원"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최근 서방의 인권 공세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에 겁먹은 자들의 최후 발악"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2면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인민의 헌법'에서도 사회주의헌법 제·개정 과정을 돌아보며 "'김일성-김정일헌법'의 채택으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을 따라 전진해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 무기를 틀어쥐게 됐다"고 자평함.

-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등, 12월 24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청소년학생들, 12월 24일 김일성父子동상 참배(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4년 국가표창 수여식, 12월 25일 김영남·최태복·양형섭·김평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2.26, 중앙방송)
-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12.30)' 3주년에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12월 25일 리일환(당중앙위 부장)·현상주(직총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2.25, 중앙방송)
- '김정은 현지말씀 관철' 위한 김정숙 평양방직공장과 평양메기공장 종업원들의 귤기모임, 12월 25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 및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와 결의문 채택(12.26, 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함경북도)·평양메기공장 현지 요해 및 일꾼협의회(철강재 생산에서 원료·연료의 국산화비중 높일 것, 양어의 과학화·집약화 실현 대책 수립) 진행(12.26, 중앙통신·평양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12.28, 중앙방송)
- '헌법절' 42주년을 맞으며 '조선식 사회주의는 김일성·김정일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라며 '당의 영도 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조선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이며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워나갈 것'을 강조(12.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1995.12.25) 발표 19돌 즈음 '장군님의 영도사는 천만군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혈연의 정과 의리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빛내어 온 성스러운 역사'라고 칭송하며 '원수님의 영도에 의하여 우리 사회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12.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2월 23일 모범적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할 데 대한 정령 제292호 발표(12.28,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허병(황해남도 삼천군 거주) 氏에게 100회 생일상 전달(12.28,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3년 탈상' 북한, 경제발전 통한 부강번영 촉구(12/20; 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1면에서 '올해 전투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하자'는 제목으로 전국의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절연물공장, 협동농장, 광산 등 일선 산업현장의 계획 초과 달성 등의 성과를 부각시킴.

- 또 신문은 2면과 4면에서도 수산업과 의약품을 통한 경제발전상을 소개하는가 하면 주택지구에 잔디밭 대신 텃밭을 가꾸 채소 부족을 해결하고 감나무를 심은 농촌마을을 선전하기도 함.
- 이에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탈상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첫 현지지도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아 학생 교복 생산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전함.

■ 북한 "포전담당제로 올해 농업생산 증대"(1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한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 한해 가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포전담당제, 과학영농, 다모작으로 생산 증대를 이뤘다고 평가함.
- 신문은 올해 모내기·날알털기 등 농사 일정을 예정보다 빨리 끝내고 생산량과 수매계획을 적절히 세운 것을 포전담당제 확대 성과로 소개함.
- 이어 "우리 식의 경영관리방법인 포전담당 책임제는 모두가 땅의 주인, 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포전 배분으로 농민의 생산 열기가 높아졌다고 자평함.
- 신문은 또 과학영농이 확대 적용돼 생산에서 '비약'을 이뤘다며 무(無) 바이러스 감자 종자 확보, 기상관측장의 협동농장 배치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으며 옥수수·감자의 다모작 확대 노력도 부각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관리 "올해 곡물 수확량 571만t...작년보다 많아"(12/23,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 내각 수매양정성의 김지석 부상은 23일 "올해 가뭄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571만t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만t 증가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밝힘.

- 김지석 부상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밀 2만2천900t이 23일 남포항에 도착한 데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으며, 또한 러시아가 지원한 밀을 평양 제분공장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러시아 정부의 '對北 무상 지원 식량 5만t 납입 완료' 기증식, 12월 23일 남포항에서 진행(12.23, 중앙통신·중앙방송·조선신보)
- 함주추상1호발전소(함경남도 함주군) 건설 준공식, 12월 26일 태종수(함경남도黨 책임비서)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 및 '黨 감사문' 전달(12.26,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이과대학 화학생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포도당검출용 효소시험지의 '수입대체 비용절감·위생학적 문제해결' 선전(12.26,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 또 '먹통'(1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날 오후 8시께 다운된 이후 11시간여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려명과 김일성방송대학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강당도 24일 오전 6시30분까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전날 다운됐던 웹사이트들은 24일 자정께 또 다운됐지만 1시간여 만에 복구돼 현재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미국의 인터넷망 연결정보 제공업체 딘 리서치는 전날 북한과 전 세계 인터넷 사이의 연결망이 오후 3시41분(한국시간 24일 0시41분) 끊겼다가 1시간여 만에 다시 개통됐다고 전했다는 소식을 뉴스는 전함.
- 북한 인터넷망 옛새째 접속 불량...중국 서버 '다운'(12/28,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이날 오전 11시 현재 북한의 주요 매체 웹사이트 접속을 시도한 결과,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류경', '려명'은 여전히 접속 불가능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에 서버를 둔 이들 웹사이트는 지난 23일 북한 주요 웹사이트들이 일제히 다운된 이후 접속 불안정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또 독일 베를린에 서버가 있는 대외용 포털사이트 '내나라'의 경우 접속이 간헐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는 현재 완전 정상화됐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민족통신 웹사이트도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고 뉴스는 덧붙였다.

- "북한 전력난 여전히 심각...수시로 정전"(12/28,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의 전력난이 여전히 심각해 수도 평양에서 요즘도 전력 공급이 수시로 끊기고 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현지발로 28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평양의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도 하루에 여러 차례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전이 되면 인터넷과 국제전화도 끊긴다고 전함.
 - 북한 여러 지역에는 수력 발전소들이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가뭄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전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함.

- 김일성父子 동상 제막식, 12월 24일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에 건립(12.24, 중앙통신)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과 김정숙 생일 97주년 관련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12월 24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12.24, 중앙통신)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과 김정숙 생일 97주년 관련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12월 24일 각지에서 진행(12.24,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현지지도 표식비·혁명사적 표식비, 태권도전당 등(함흥목제품공장·수성천종합식료 공장·자강도 산림과학연구소 등) 건립 및 각각 준공식 진행(12.26, 중앙방송)
-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김정숙 생일 97주년 기념, 12.3 개막) 폐막식, 12월 26일 빙상관에서 진행(12.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민족음악경연 진행(40여개 단체 참가) 및 결과 보도(12.26, 중앙통신)
-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12.30)' 3주년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12월 28일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황해북도 황주군 용천협동농장에서 진행(12.28,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북한 인터넷 한때 완전 다운” … 미국 ‘보복’ 가능성 (12/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후 북한의 인터넷망이 23일(한국시간) 완전히 멈춰 미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 뉴햄프셔 주에 본사가 있는 온라인 인프라 관리업체 딘 리서치에 따르면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인터넷 연결 상태의 품질이 최근 24시간 동안 계속 저하했으며 이날 한때 완전한 불통 상태에 빠짐.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완전 다운됐으나 오전 11시께 일부 접속이 재개된 뒤 오전 11시40분께 모두 정상화됨.
 - 한편 중국이 미국 요청에 따라 북한의 소니 해킹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함. 중국 정부의 조사 결정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해킹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내려졌다고 소식통은 전함.
-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상징적 … 실효성 크지 않아” (12/2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이는 상징적 효과에 그치고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최선의 대응방안은 아닐 수 있다”고 말함.
 -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도 높게 제재받는 국가의 하나”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재 체제에 의해 무기수출과 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해외원조 금지, 금융지원 차단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국무장관이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그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제테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함.

■ 北 외교관 "영화 '인터뷰' 배포에 물리적 대응 없을 것" (12/25, 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온·오프라인 배포를 비난하지만 '물리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이 24일(현지시간) 밝힘.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이날 AP통신에 이 영화는 "우리의 주권과 최고지도자의 존엄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조롱"이라며 북한은 이날 시작된 '인터뷰'의 온라인 배포와 성탄절부터 이어질 극장 상영에 반대한다고 밝힘.
- 그러나 그는 영화의 배포·상영과 관련해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김성 참사관은 또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해킹된 것과 북한은 연관이 없고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공동조사를 거부한 것에 불만을 나타냄.

■ '소니해킹' 후 미 대외정책 전면에 '북한' 다시 부상 (12/26, 연합뉴스)

-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고리로 미국 상·하원이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고 행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옵션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한해의 대외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방향을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음.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 외교위는 내년 1월6일 114대 회기가 개원하는 대로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개원 후 일주일 정도 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중순쯤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북한 '인터뷰' 상영 비난 … "미국이 인터넷 가동 훼방" (12/27,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상영 강행을 비난하며 최근 계속되는 인터넷망 불통 사태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함.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소니에 대한 해킹 공격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보수세력들이 성탄절에 영화 상영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을 '열대수림 속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 누가 제 놈에 대한 테러를 즐거리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표현의 자유'를 떠들며 환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또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장 신성시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 최고 존엄"이라며 "미국이 계속 날강도적인 전횡에 매달린다면 미국의 정사가 구제불능의 심대한 치명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미국, 북한의 오바마 원숭이 비유에 일단 '반응자제' (12/2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상영 강행과 관련해 북한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원숭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일단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함.
 - 미국 국무부는 이런 비유와 북한이 잇따른 인터넷망 불통 사태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한 데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이날 언론 질의에 입장 표명을 거절함.
 - 케이틀린 헤이든 NSC 대변인은 당시 성명에서 "북한 관영 통신이 과장된 언동으로 악명 높기는 하지만, 이번 언급은 특히 추하고 무례하다"고 밝혔고,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역겹다"고 일축함.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푸틴 측근 "김정은 내년 5월 러시아 방문할 듯" (12/22,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내년 5월 러시아의 초청에 따라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 같다고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이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우샤코프는 이어 "2차대전 당시 반(反)히틀러 연합에 속했던 국가들의 대표와 다른 많은 정상들이 초청됐다"고 말함.
 - 앞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5월 9일 2차대전 승전 기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지난 19일 발표함.
- "러시아, 북한에 러시아어 교재 1천400권 기증" (12/25, 연합뉴스)
 - 북한과 밀월 관계인 러시아가 북한에 러시아어 교재 약 1천 400권을 기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RFA는 이날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웹사이트를 인용해 연해주 정부가 문학, 역사, 언어 등 여러 분야의 러시아어 교재 1천 365권을 북한에 기증했다며 기증식이 24일 주 정부 청사에서 열렸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북·러 양측이 북한 사회에서 러시아어를 대중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함. 연해주 정부가 북한에 러시아어 교재를 기증한 것은 최근 북한에서 외국어 교육 열기가 높아진 데 발맞춰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RFA는 분석함.

바. 기타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으로 다룬다 (12/23, 연합뉴스)
 -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됨. 이에 따라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함.
 -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29일 체결 (12/26, 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29일 체결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발표함.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위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힘.
 -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나. 한·중 관계

- 중국, '원전도면 유출사건' 사법공조 수용 시사 (12/24,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도면 등 유출사건과 관련한 한국 측의 사법 공조 요청에 대해 "해킹 문제에 대한 각국과의 협력과 공동 대응을 희망한다"며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힘.
 -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한국 수사 당국의 사법 공조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용한 IP가 중국 선양(瀋陽)에 집중적으로 몰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IP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음.
 - 그는 "인터넷 공격은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데에는 전문적이고 완전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사실에 근거해 관련 국제법 원칙과 중국의 법률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함.

- 중국, 한·미·일 정보약정 체결 '예의주시' (12/26,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기로 한 것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히고, 관련국에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라고 촉구함.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한·미·일 3국간의 정보공유 약정 체결 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총체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총체적인 완화 국면은 여전히 비교적 취약하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관련국들이 상호 대화와 신뢰를 촉진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라며 그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이런 중국 정부의 반응은 한·미·일 3국간의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세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됨. 한국 국방부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오는 29일 체결할 예정이다.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사형 유예·무기징역 (12/26, 연합뉴스)
 - 중국 장쑤(江蘇)성 난통(南通)시 중급법원은 최근 한국인 마약사범인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사형 유예(2년)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전함.
 - 김씨와 정씨는 중국인과 일본인 등 마약 범죄꾼들이 다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이를 운반하는데 참여했다가 적발됨.
 - 앞서 중국은 지난 8월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함.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하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한·일 방위협력 진전" <교도통신> (12/26, 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탐지하기 쉬운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측도 일본의 정보 수집을 통한 대북 감시체제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2012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면서 이같이 전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체결되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한·일 관계는 역사문제 등으로 냉각돼 있지만, 미국의 주선 등에 의해 두 나라 방위협력이 한걸음 진전되게 됐다"고 지적함.
 - 닷케이는 이번 약정 체결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분야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미, 미일의 엄격한 정보관리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안심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한·일, 내주 초 서울서 외무차관급 협의" <교도> (12/27,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내주 초 서울에서 외무차관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함.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르면 29일 한국을 방문,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현안을 협의할 예정임.
 - 이번 협의는 그동안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5차례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협의 주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열리는 것임.
 - 사이키 차관은 조 차관을 만나 한·일 관계 정체는 쌍방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기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 日 외무차관 29일 방한 … 한·일, 연말 이례적 협의 (12/28, 연합뉴스)
 -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9일 하루 일정으로 방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한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힘. 이번 협의는 애초 예정에 없던 것으로 일본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년이 되는 2015년 새해 시작을 앞두고 연말 이례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됨.
 - 앞서 조 차관과 사이키 차관은 지난 10월1일 일본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바 있음. 사이키 차관은 지난 3월에도 방한해 조 차관과 한·일 차관급 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 차관급 협의회가 정례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옴.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중국, 미국 요청에 북한 소니 해킹 연관성 조사 착수 (12/23,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소니 해킹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함. 이 소식통은 중국 외교부가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등 다른 기관들의 예비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함.
 - 중국 정부의 조사 결정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해킹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내려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소니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미국은 앞서 영국과 일본, 한국 등 우방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조사 협조를 요청함.
 - 왕이 외교부장도 21일 케리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위를 반대한다"며 일정 부분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미국, 류샤오보 석방 촉구 … 중국 "내정간섭" 반발 (12/2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석방을 거듭 촉구하자 중국 외교부는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반박함.
 -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류샤오보가 정권정복 기도 죄로 수감된 지 오늘로 꼭 5년이 됐다"면서 "중국 정부가 아직 류샤오보를 구금하고 그의 부인인 류샤를 가택연금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힘.
 -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법치국가로 중국의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면서 "미국 측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각종 인권 침범 행위를 반성하고 교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함.

바. 미·일 관계

- 일본 "'북한 해킹' 강력 비난 … 美와 공조" (12/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특정한 미국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북한을 강력 비판함.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해킹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며 미국의 대처를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서도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해킹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힘.
- 또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함. 스가 장관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구키로 한 것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상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일·북회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 "일본, 자위대 함정에 미사일요격 공동교전 시스템 장착" (12/28, 연합뉴스)
 - 일본 해상자위대는 적 미사일의 위치 정보를 자위대끼리 공유해 즉각 요격할 수 있는 '공동교전능력(CEC)' 시스템을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이지스함에 장착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8일 보도함.
 - 자위대의 CEC 도입은 처음으로, 미군과의 공동 운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단 자위권 행사 체제 정비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미국이 개발한 CEC는 이미 미해군의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에 장착돼 있음. 자위대가 CEC를 미군과 공동 운용할 경우 미함정을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CEC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됨.

사. 미·러 관계

- 푸틴, 오바마·김정은에 동시 방러 초청 (12/22, 연합뉴스)
 -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기념 70주년 행사에 베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함께 초청함.
 -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은 2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2차대전 당시 반(反)히틀러 연합에 속했던 국가들의 정상들이 초청됐다"며 "지난 (60주년) 승전기념 행사에 초청됐던 국가들이 주로 포함됐다"

고 말함.

- 우샤코프는 또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도 초청장을 보낸 사실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보인 초기 반응은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승전기념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힘.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우샤코프의 발언을 토대로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 같다고 보도함.

아. 중·일 관계

- 중국 "일본, 양국관계 발전 위해 노력해야" (12/24,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3차 내각이 공식 발족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이 중국과 함께 마주보며 '4대 원칙 합의'를 진지하게 실현하길 희망한다"면서 "중·일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이 밝힌 '4대 원칙 합의'란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이뤄낸 것으로, 중일 양국이 정치적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양국 관계 처리 및 개선에 관한 4개 합의사항이 담겨 있음.
 - 화 대변인은 "중국은 양국이 그동안 체결해온 4개의 정치문건을 기초로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향하는 정신에 입각해 중·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함. 그는 "우리는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지역의 평화·안정·발전을 수호하고 촉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중·일, 해상 우발충돌 방지회의 내년 1월 개최" <산케이> (12/27, 연합뉴스)
 - 중·일 정부는 중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 간의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한 '해상연락 메커니즘' 운용 개시를 위해 내년 1월 방위당국 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함.
 - 복수의 중·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연차회의 개최, 핫라인 설치, 현장 해석의 통신 수단 공동화에 원칙 합의했으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운용을 개시한다는 목표임. 이와 관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발적인 사태의 위험성 제거를 위해 조기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해상연락) 메커니즘이 확실히 운영되도록 (중·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일, 2년여 만에 에너지·환경회의 ... "관계개선의 재료" (12/28, 연합뉴스)
 - 중국·일본 정부와 양측 기업이 참여하는 '중·일 에너지절약·환경종합 포럼'이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중국 측에서는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전화 부주임이, 일본 측에서는 다카기 요스케 경제산업 부(副)대신이 참석함.
 - 세 부주임은 "중국은 에너지절약 태세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 관계 개선의 좋은 재료가 된다"고 말함. 다카기 부대신은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한 책임을 함께 수행하고 싶다"고 밝힘.
 - 교도통신은 이번 포럼이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국유화로 양국 관계가 악화해 중단됐다가 2012년 8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재개됐으며 지난달 성사된 중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 사이에 열린 첫 대규모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함.
- "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경고' 운영규칙 삭제" (12/28, 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의 경고 운영 규칙이 삭제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함.
 -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공당국이 최근 각국에 통지한 항공정보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군당국이 방어적인 긴급조치를 취한다'는 운용규칙이 삭제됨.
 - 중국 국방부는 작년 11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을 때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칙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군당국이 방어적인 긴급 조치를 취한다는 운용 규칙을 공표함.

- "중국군, 일본본토 남북 포위훈련 첫 실시" <대만매체> (12/28, 연합뉴스)
 - 중국군이 최근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사실상 일본본토를 남북으로 포위하는 훈련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가 군 전문가를 인용해 28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이달 초부터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소속 군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서태평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음.
 -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하얼빈(哈爾濱)호(4천550t급) 등 북해함대 소속 군함 세 척과 종합보급선 등은 지난 4일 일본 남부에 있는 오스미(大隅)해협을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뒤 오후츠크해까지 북상함.
 - 대만 해군전문가 장징은 "동해함대와 북해함대의 항적과 훈련 시기를 고려해볼 때 중국군은 이번 (서태평양) 훈련과정에서 처음으로 일본본토에 대한 남북 포위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정부 "표류 北주민·어선 23일 북측에 인계"(12/22, 데일리NK)
 -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해양경찰대에 구조된 북한 어선 1척과 어민 1명을 23일 북측으로 모두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 어민 1명은 수산사업소 소속 20대 남성 '어로공'(고기잡이 노동자)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함.
 - 이 당국자는 이 남성의 의사에 따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북방한계선(NLL)상에서 북한 어민 1명과 선박을 인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함.

- 북한, 통진당 해산 빌미 대남 인권공세 '포화'(12/22,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인권 공세의 종착점은 도발자들의 파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판결을 기회로 남측이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중북몰이'에 빠져 있다며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음.
 - 논평은 한국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문제 의제 상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음.
 - 또 '독재광의 정체를 드러낸 중북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중북 논란을 빚은 황선·신은미 씨 토크쇼 사건을 소개하며 국정개입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중북몰이 소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전날 논평에서 "통진당 해산으로 남조선은 피비린내 나는 유신 독재시대로 회귀했다"고 비난했으며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연일 주민 인터뷰 형식으로 통진당 해산을 비난했음.

- 북한, 남한·미국·일본 "인권 논할 자격 없다"(12/23,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민주의 교살자,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는 제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남한과 미국, 일본의 '인권 유린 행위'를

주장하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음.

-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남한의 인권을 문제 삼은 다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독재와 악정이 살판치는 남조선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질식된 세계 최악의 독재 사회이자 인권의 황량한 불모지"라며 남한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 북한은 특히 안보리의 정식 안건 채택에 대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해 모략의 판을 더 크게 벌이려는 것"이라고 헐뜯었음.
 - 또 '제 처지도 모르고 날뛰는 폰수 없는 자들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미국을 향해 '고문선진국'이라며 "세계 도처에서 불법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 것은 철면피성의 극치이며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음.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논평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살펴보는 인간 세계의 보편적 윤리부터 배우는 것이 정신 분열증에 시달리는 미국을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비꼬.
- 유럽 CIA 고문협력 비난... "인권유린 공범"(12/24,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날날이 드러난 인권유린공모자들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행위를 도운 유럽연맹(EU) 국가들을 또다시 거론하며 유럽이 미국 인권유린범죄의 공범자라고 비난했음.
 - 이어 "유럽이 다른 나라들의 국권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미국과 다를 바 없이 지배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의 인권유린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국제법을 심히 위반한 것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라고 강조하고 유럽은 인권문제를 논할 기본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 북한, 올해 곡물 수확량 작년比 약 5만톤 증가(12/24, 데일리NK)
- 북한 내각 수매양정성의 김지석 부상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올해 가뭄 피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571만t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 통신에 따르면 김 부상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밀 2만 2900t이 이날 남포항에 도착한 데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 한편 노동신문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상지원하기로 했던 식량 5만 t이 24일 남포항에 도착해 북측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 북한 "남한, 유엔 인권모략 적극 가담...대가 치를 것"(12/25,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5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비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 담화는 유엔총회 본회의가 지난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2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을 거론하고 이는 "사실상 우리를 반대하는 선전포고"라며 남한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돌격대"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전세계가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합법적인 민주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파쇼적 폭거까지 감행해 전세계의 비난·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박근혜 폐당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요 뭐요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덧붙였다.
- 北유엔대표부, 北인권 안보리 의제상정 반발 성명(12/25, 연합뉴스)
 -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유엔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의제 상정에 반발하며 미국 등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북한 대표부는 성명에서 "회의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해치고 신조와 체도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정치 목적에서 열렸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은 다루지 않고 북한인권만 다루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 북한, '무단 입북' 한국 주민 남측에 송환(12/26, 미국의 소리)
 - 통일부는 26일 오전 판문점에서 지난 달 무단 입북했다 적발된 마모(52) 씨의 신병을 인수 받았다고 밝혔으며, 마 씨의 건강상태 점검 뒤 입북 경위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마 씨가 지난달 말 불법 입북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마 씨를 설득해 부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 조선신보, 올해 8대 북한뉴스 선정(12/26, 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올해의 주요 북한 뉴스로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의 선전을 포함해 8가지를 선정했음.
 -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에 더해 지난 3월 초 5년 만에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올해의 주요 뉴스로 꼽았으며, 2월의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와 제8차 사상일꾼대회, 과학기술 중시 정책, 북한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발, 경제사업의 '조선속도' 창조 등을 주요 북한 뉴스로 나열했음.

- 북한, 헌법질 맞아 체제 우월성 강조하며 준법 촉구(12/27,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헌법질'인 27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준법정신을 촉구했음.
 - 신문은 최근 서방의 인권 공세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에 겁먹은 자들의 최후 발악"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함.

2. 북한 인권

- 국민 10명 중 7명 북한인권법 제정 찬성(12/22, 연합뉴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2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1%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함.
 - 또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72.8%에 달해, 북한 내부 문제이므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응답자는 19.3%에 그침.
 - 다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는 61.7%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음.

- 개선 방안으로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40.4%)을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6%), '국제사회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5.2%)도 적지 않아 압박과 대화가 고르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천호선 정의당 대표 "북한, 인권문제 무겁게 받아들여야..."(12/22, 시사위크)
 -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2일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통과를 언급하며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직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이어 "우리 정치권 역시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가 우리 내부의 갈등과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음.
 - 천 대표는 "특히 이념갈등을 조장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개선은 우리 사회 다수의 합의와 공감 속에 합리적 방법으로 추진돼야 평화를 지키면서 실질적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밝혔음.
- 뉴욕 맨해튼에 '북한 인권결의안 환영' 포스터(12/23, 연합뉴스)
 - 유엔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반(反) 인권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는 포스터가 2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걸렸음.
 - 재미동포 한태격(66)씨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C)가 기획한 이번 포스터는 한글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환영합니다"라고 적힘.
 - 또한 영문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할 때'이며,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는 북한 최고지도층에 의해 제정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자행됐다"는 내용도 소개됐음.
 - 타임스스퀘어, 한인타운, 그랜드센트럴역 등 맨해튼 내 중심가 3곳에 나붙은 이번 포스터는 28일까지 게시될 예정임.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으로 다룬다(12/23, 연합뉴스)
 -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음.

- 북한인권 상황은 정식 안건 채택 여부를 두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2표, 나이지리아와 차드의 기권 2표로 가결되었음.
 -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이며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음.
 - 안건 채택 이후 안보리는 유엔 사무국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담당 사무차장으로 부터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사국 대표들의 발언을 들었으며,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북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안보리가 나설 것을 촉구했음.
 - 미국의 서맨사 파워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아 있는 악몽"이라고 표현했으며, 영국의 마크 그랜트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국제사회를 깨우는)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라며 환영했음.
 -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던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아닌 만큼 북한 인권 논의에 반대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의 오준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에서 처음 논의됐다는 것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 인권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음.
- 정부 "안보리 '북한상황' 의제 채택 환영...논의 기대"(12/23, 연합뉴스)
- 정부는 2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했음.
 - 정부는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향후 안보리에서 금년(유엔)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與 "국민에 걱정 끼쳐선 안돼"...국회정상화 압박(12/23, 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23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음.
 -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어제 외통위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운영위 개최를 주장하는 야당의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야당은 조속히 심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음.

- "北인권 현장사무소 내년 3월 목표로 설치추진"(12/23,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내년 3월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유치 협정의 내용도 완결이 안되어 언제 개설될지 두고봐야 한다고 전함.
 - OHCHR은 서울시·외교부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터빌딩에 설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해 왔으며, 가급적 내년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전에 개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또한 OHCHR과 한국 정부는 사무소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범위 등을 다룬 유치국 협정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北 인터넷 다운 중국개입 보도, 무책임"(12/23,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음을 확인했음.
 - 화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안보리는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與, 北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처리 추진(12/25, 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25일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하고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섰다.
 -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10여년간 입법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음.

-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앞서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도 했음.

3. 탈북자

- 북송 청소년들, 헤산 제1중에 재학(12/23,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해 5월 라오스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된 탈북청소년들 중 4명이 '헤산 제1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지 소식통들은 이들을 국경연선 도시인 헤산시에 데려다 놓은 당국의 조치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음.
 - 최근 양강도의 소식통들은 "한국으로 가려다 잡혀 온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 4명이 '헤산 제1중학교'에 온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면서 "그들이 '헤산 제1중학교'에 온 날짜는 12월 5일"이라고 말했음.
 - 그에 따르면 헤산 제1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학생들도 그들의 정확한 이름과 나이를 모르는 실정이며, 이들이 임시로 온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학교에 남을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음.
 - 하지만 소식통들은 "라오스에서 잡혀온 청소년들이 '헤산 제1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산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자신들도 이 같은 사실을 '헤산 제1중학교' 학생들로부터 들은 것이어서 일부 잘 못된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음.
 - 특히 소식통들은 "한국으로 가려고 탈북한 청소년들을 하필이면 국경연선에 있는 '헤산 제1중학교'에 배치한데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국가보위부가 그들을 미끼로 무언가를 꾸미려고 함정을 파 놓았을 수도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음.

- **中서 체포된 탈북자, 한국정부 보호받을 길 열렸다(12/24, 조선일보)**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한·중 영사(領事)협정에 '한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체포·구금될 경우 중국 측이 4일 이내에 이름, 신분 확인 방법, 구속 이유, 날짜와 장소, 접촉 가능 장소를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음.
 - 정치권에서는 "협정의 적용 대상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 파견 국민'으로 규정된 만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가 한국 국민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들의 소재를 한국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음.

- **"한중 영사협정, 탈북민 보호와 직접 관련없다" 왜?(12/24, 국민일보)**
 -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한·중 영사협정 체결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협정은) 탈북민 문제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한·중 영사협정상 파견국 국민에 대한 정의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함.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일본 '납북 피해자 재조사 우려'(12/23, 아시아투데이)**
 -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대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북·미의 대립으로 북·일 납북 피해자 조사가 미뤄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며 미국의 대처를 지지하고 있다"며 "일본으로서도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해킹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며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추진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상와의 관련성에 대해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납치 피해자 재조사는 북·일 간의 합의지만, 일본이 미국에 협력한다면 조사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음.
- "북한, 일본인 납치 재조사 결과 내년에야 통보할 듯" <닛케이>(12/24,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의 1차 결과를 내년 1월 이후에나 일본에 통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음.
 - 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내에 1차 조사결과를 통보받길 희망했지만 북한이 통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함.
 -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당국 간 협의 이후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 라인을 통해 북한을 재촉했지만 북한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으로 일관했다고 신문은 소개했음.
 - 북한의 느장 대응은 일본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비난 결의에 대한 반발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며, 미국 영화 '인터뷰'를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 국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NGO, 북한 에볼라 관련 조치로 지원품 선적 연기(12/25, 미국의 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은 북한이 에볼라 차단을 위해 입국 외국인을 격리하고 있어 분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중 북한에 지원품을 보내려던 계획을 연기했음.
 - 이 단체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12월 중 북한에 식료품과 의약품 등을 보낼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방북하지 못해 분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지원된 물품이 제대로 도착해서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부자들에게 대한 책임이라며, 북한이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설명임.

8. 북한동향

-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타령은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노골적인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7.22, 중앙통신·노동신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12.22)】 「통진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전대미문의 대정치 테러'라며 '이번 사태의 막후 주범은 바로 다름 아닌 박OO'라고 대통령 실명 비난 및 '反정부 투쟁' 선동(12.22, 중앙방송·중앙통신)
- 괴뢰보수패당이 통진당 해산을 강행한 것은 정윤희 국정개입 사건으로 저들에게 쏠리는 비난여론을 무마시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음.

-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北 인권' 문제 의제 상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괴뢰패당이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우리(北) 사회주의를 넘보는 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라고 비난(12.22,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 공세의 종착점은 도발자들의 파멸)
- 우리 정부가 '美 CIA 고문'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南 괴뢰들은 친미주구, 식민지 노복'이라며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에 바른말 한마디 못하는 쓸개 빠진 주구들은 우리(北)의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비난(12.22, 중앙통신·노동신문/식민지 주구의 더러운 악습)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委 대변인 담화(12.23), 南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정치테러행위, 진보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교살만행, 동족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反보수패당 투쟁' 선동(12.23, 중앙방송·중앙통신)
- * "현 괴뢰집권 세력의 동족대결 정책과 파쇼독재체제 구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음모의 산물"이라고도 비난 공세(12.23, 중앙통신·노동신문/희세의 파쇼적 전횡, 경악할 정치테러사건)
-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참여(11.18, 유엔총회 제3위원회, 北 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 "주제넘은 망동, 남조선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독재사회, 인권불모지"라고 최근 '통진당' 해산 결정 등 거론하며 비난(12.23, 중앙통신·노동신문/반역정치와 인권은 양립될 수 없다)
- 러시아 정부의 '對北 무상 지원 식량 5만t 납입 완료' 기증식, 12월 23일 남포항에서 진행(12.23, 중앙통신·중앙방송·조선신보)
- 러시아 정부의 식량지원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임.

- 美 당국자들의 '北 인권문제' 언급(12.10.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의 '세계 인권의 날, 탈북자 초청 대화' 등)을 "핵 소동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北)의 제도전복을 인권을 무기로 이루어보려는 것"이라며 'CIA 고문만행 등 미국의 국내외 인권유린실태' 비난(12.23, 중앙통신·노동신문/제 처지도 모르고 날뛰는 폰수없는 자들의 망동)
 - *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살펴보는 인간세계의 보편적 윤리부터 배우는 것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미국을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이라고도 주장(12.23, 중앙통신·민주조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 등 관련 '오늘의 남조선 사회 현실은 과거의 독재체제와 파쇼폭압통치가 살판 치던 그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정치는 없고 폭력만이 난무하는 곳'이라고 비난(12.24, 중앙통신/현대판 유신폭거)

- 【「조평통」 대변인 담화(12.25)】 '北 인권' 유엔안보리 정식안건 채택 관련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12.25, 중앙방송)
 - 박OO 패당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날조하여 걸고들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가리고 민심의 이목을 딛 데로 돌려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기도가 깔려 있음.
 - 반공화국 대결광신자들이 우리(北)에게 인권전쟁을 선포해온 이상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며 괴뢰패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우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매국이 애국을 칼질하는 전대미문의 파쇼폭거'라며 '박OO 패당은 역대 통치배들을 훨씬 능가하는 희세의 파쇼악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내 놓았다고 비난(12.25, 중앙방송·민주조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